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75차 전문가포럼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우리는 어떻게 돌고래가 될 것인가?

일시 | 2017년 4월 17일(월) 오후 2시 - 5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13:30	접 수	
14:00	개 회	
14:05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4:10	사 회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14:15	발 표 1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14:35	발 표 2	북한의 현실과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14:55	발 표 3	북·미 충돌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제안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15:15	토 론 1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토 론 2	이정철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3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6:00	전체토론	
16:30	청중 질의응답	
17:00	폐 회	

여는 말	04
발 표 1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05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발 표 2	북한의 현실과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25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발 표 3	북·미 충돌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제안	35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토 론 1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45
토 론 2	이정철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6
토 론 3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7

여는 말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이어 미국은 신속하게 사드포대의 일부를 한반도에 전개시킴으로써 상황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드문제의 명분인 북핵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의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한국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당사자이면서도 동시에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전 방위적인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외교·안보는 주인 잃은 편주가 되어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래싸움 속에 속절없이 당하는 새우가 아닌 돌고래의 위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외교·안보의 자주적 공간을 마련하여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 등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의미를 짚어보고, 북한의 대외전략과 북·미관계를 전망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안을 논의하는 전문가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발표 1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단극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이제 중국에게 기존질서의 이해 상관자(stake-holder)가 되라고 강요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기존의 미국 중심의 정치, 경제, 안보 질서의 기반은 침식되었고, 트럼프 정부 자체가 기존 패권, 세계화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6-7일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은 지역이나 세계질서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양국의 현안인 무역 분야에서는 ‘백일 계획’을 통해 협력하기로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한 채, 공동선언도 공동기자회견도 없이 끝났다. 중국은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와 경제적 보복을 굽히지 않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시리아 공습과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서 북핵에 대한 독자적, 군사적 옵션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이 무엇이든 한미동맹의 군사적 논리가 갖는 실제적 위험이 무엇이든, 이념이 되어버린 친미에 입각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쳐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는 한반도의 안정이나 평화든 물론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패권 엘리트들은 트럼프의 민중주의적 반세계화, 반패권 운동에 직면해서 미국패권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존 질서의 전면적 ‘재건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구조의 전면적 재건축이 없이는, 북핵과 사드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빚어내는 위기 역시 끊임없이 재연될 것이다. 이러한 재건축 작업은 한국의 기존 권력 구조와 이념 전체의 전환, 구체적으로는 안보와 친미에 기댄 기득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I. 단극의 종언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대통령 선거 직후 미래의 세계질서에 대한 전망, 글로벌 트렌드 시리즈를 발표한다. 대통령이 장기적인 역사적 전망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2016년 대선 이후 2017년 1월에 발표된 “진보의 역설: Paradox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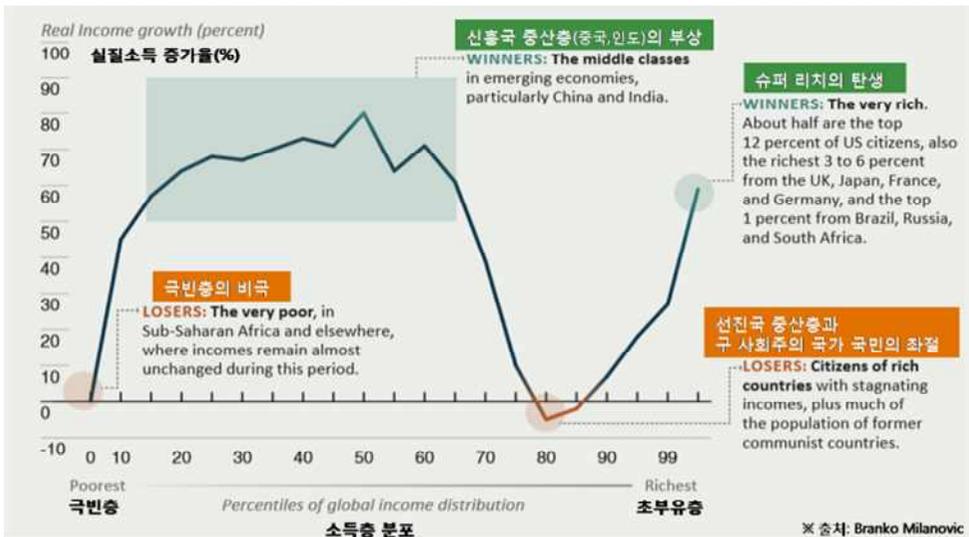
Progress)”은 소득 불평등, 저성장, 기술발전에 따른 혼란 등의 ‘우울한 전망’을 담고 있는데, 국제질서에 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단극시대의 종언을 선언한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냉전 이후 단극의 순간은 끝났고, 어쩌면 1945년 이후 규칙에 기반 한 국제질서 역시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패권의 기반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 세계자본주의, 그리고 전 지구적 동맹과 군사력 투사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가치와 경제, 안보 영역의 조화는 패권의 본질적 과제이자 딜레마이다. 세계자본주의의 논리와 지정학적, 안보군사의 논리는 항상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즉, 다수의 민주적 지배와 소수 자본가의 지배를 조화시키는 것은 항상 어려운 과제이다.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냉전 이후 미국패권의 핵심 기획이었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비극, 구체적으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중산층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의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왔다.

1. 코끼리의 비극

1) 신자유주의의 ‘성과’



2) 후쿠야마의 변질 혹은 반성: 신자유주의 삼단논법

“역사의 종언, 십년 후(Second Thoughts, 1999)”에서 후쿠야마는 십년 전 자신의 ‘역사의 종언’ 주장이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회고했다. 하나는 크게 잘못된 것인데,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본성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대혼란과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찰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파국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전제에서 신자유주의의 삼단논법, 즉, 경제적 성장의 유일한 길은 워싱턴합의이고, 경제성장은 중산층의 부상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확산을 추동하며, 이는 다시 세계평화로 이어진다는 낙관론을 제기했다.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후쿠야마는 민주주의가 쉽게 이식될 수 있다고 믿는 네오콘과 결별하고 미국패권의 한계와 정치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는 워싱턴합의의 문제점, “역사의 미래: 중산층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생존가능한가,” 그리고 미국헌정 질서의 구조적 문제점에 주목하는, ‘변질’ 혹은 반성을 심화시켜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은 분야별로 경제적 저성장, 민주주의의 역진, 그리고 지정학의 부활과 테러/난민/이민문제의 착종이 진행됨과 동시에, 분야별 선순환구조가 악순환으로 역진된 상황이다.

브렉시트나 트럼프현상은 이러한 역진의 산물이다.

2. 미국패권의 한계

“미국대전략의 스트레스 검사(Stress-Testing American Grand Strategy, 2016)”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브래든와 피버(Hal Brands and Peter Feaver)는 단극시대 미국패권전략의 전제들이 과연 유효한 지를 점검한다.

- (1)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지구적 수준에서는 유효한 전제이지만 지역적 수준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그렇지 않다.
- (2)미국 동맹의 상대적 쇠퇴: 미국이 부유하고 능력 있는 동맹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3)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통합될수록 중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는, 중국 통합의 전제 혹은 기대는 무너졌다.
- (4)지정학의 부활로 강대국 간 전쟁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obsolete)는 전제도 유효하지 않다.
- (5)민주주의의 확산이 비가역적이라는 전제는 무너졌다.
- (6)지구화는 대세다, 피할 수 없다(inexorable)는 전제도 마찬가지로 무너졌다.
- (7)기술적 진보에 대한 낙관론, 기술혁신이 인류발전과 자유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고, 특히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전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추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패권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의지인데,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들의 결론이었다.

3. 자유주의의 파괴자 미국

트럼프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이다. 신자유주의의 비극, 구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불안을 배경으로 한 트럼프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의 산물이다. (이혜정, “어떻게 불구국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 우선주의” 『동향과 전망』 2017년 봄호)

미국패권에 대한 충격으로 보자면, 이라크 전쟁이 노정한 군사력의 한계 혹은 안보의 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가 증명한 경제적 위기에 이은 정치적 (의지의) 위기로, 그 함의나 충격은 외교협회가 밝히듯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1) 국내 정치적 위기로 인한 리더십의 제한: 닉슨의 정치개입에 따른 탄핵, 레이건의 헌정질서 유린, 클린턴의 사생활, 아들 부시의 (허리케인 커티리나 처리) 무능의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 무슬림 입국금지 졸속 행정명령이나 오바마케어의 폐지와 대체 입법 실패로 무능은 이미 증명되었고, 러시아 해킹, 대선 개입 스캔들에서 부패의 혐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 경제적 민족주의: 최근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모든 종류의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상투적인 문구를 공동선언문에 넣는데 반대했다. 미국이 자유무역, WTO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TPP에서 탈퇴했고 유럽과의 무역투자협정 TTIP도 사실상 좌초되었다. 보호무역의 소위 국경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 기존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도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3) 국민안전-국가안보: 기존의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구호 아래 군사력 증강과 함께 테러/난민/이민 위협의 방지에 안보정책의 방점이 찍히고 있다. 최근 발표된 트럼프의 첫 예산안은 국방부와 해외원조 예산은 30% 가까이 삭감하고, 국방비는 10% 늘렸다.

이러한 세 가지 추세는 미국 리더십의 추락이다.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나 보호무역, 그리고 에너지 개발과 기후변화 리더십 포기, 핵군비 확충 의지는 미국의 연성권력에 심각한 타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급두뇌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이단적인 정책 (신자유주의의 전통적인 탈규제와 감세, 반-공화당 노선인 인프라 투자, 반-미국적인 보호무역의 결합)은 성공하기 힘들다. 미국패권의 핵심인 성장모델의 제공이 어려운 것이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코헨 (Roger Cohen)은 “트럼프의 미국이 자유주의 질서의 파괴자가 되었다.(Trump's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become an unserious country, the offender of the free world)”라고 선언하고, 유럽에게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The Offender of the Free World, NYT 3/29/2017)

Ⅱ.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Mar-a-Lago), 4/6-7/2017

1. 왜 4월에 마라라고에서?

1) 마라라고는 트럼프 소유의 호화 리조트다. 월급을 모두 기부한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에 특하면 (2.8일에 한번이라고 한다) 들러서,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챙기는 이익의 상충이다. 부동산 재벌로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아웃사이더가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이 정도 모순이나 아이러니는 ‘뉴노멀’이 되었다.

2) 아웃사이더, 그것도 충성을 중시하는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는 인재 풀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백악관은 사위 쿠슈너와 백인 민족주의의 전략가 배년의 싸움터가 되었고, 국무부는 부장관을 비롯해서 웹페이지에 고위직으로 소개되어 있는 9개 직책 중 7개가 (4월 10일 현재) 공석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2013년 6월에 열렸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상태였고, 6월이면 각료들의 임명 등도 다 완료된 상태였다.

왜 트럼프 정부의 경우 주무부서인 국무부의 고위급 인선도 끝나고 않고, 제대로 된 정책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일까? 상견례의 의미라는 의례적 설명/추측을 제외하면, (1) 트럼프 정부로서는 선거 운동 기간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강간’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등의 공약을 ‘남발한’ 이상 미중 정상회담이 취임 초의 주요 과제였을 것이고, (2)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원한 혹은 불만의 정도를 빨리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2. 미국의 입장

1) 4/6 킬러슨(Tillerson) 국무장관 개막 브리핑

-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7/04/269540.htm>
- 미국 관계의 성격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의 시간
- 의제 1: 트럼프 정부 무역 정책의 목표는 미국 노동자의 풍요; 이 목적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관계 설정해나갈 것이다.
- 의제 2: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넣어주길 희망한다. 기존의 유엔결의안을 통해서든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든 그렇게 할 때 중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종식시키고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풍요를 보장하는 새로운 전략의 일원이 될 수 있다.
- 의제 3: 이견 이슈들, 동맹과 가치 공유 세력 보호, 사이버 공격 대응, 인권과 종교적 자유, 민주적 가치 옹호
- 질의응답은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집중, 적절한 조치를 고려 중,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대응이 필요하다.

2) 4/6 킬러슨 국무장관, 맥마스터(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 시리아 공습 브리핑

-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7/04/269543.htm>
-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러시아의 2013년 시리아 화학무기 수거 폐기 공약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 최근 화학무기 공격이 이루어진 공항을 공습.
- 질의응답은 트럼프의 공습 결정 배경, 그 의미, 향후 전망 등
- 중국에 사전 통보했냐? 는 질문도 6일 회담 첫날 만찬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주석에게 통보했다고 함.

3) 4/7 국무, 재무, 상무 장관 공동 브리핑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07/briefing-secretary-tillerson-secretary-mnuchin-and-secretary-ross>)

(1) 킬러슨 국무장관 브리핑

- 총평은 긍정적, 생산적 회담, 협력분야는 확대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견 관리.
- 의제 1: 무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와 수출에 미치는 중국 정부 정책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미국 노동자를 위해 공정한 경쟁의 틀과 호혜적 시장접근을 보장할 필요를 역설.
- 의제 2: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양측이 그 심각성을 주목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대한 공약 재확인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의제 3: 양측은 지역, 해양 안보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 트럼프 대통령은 동, 남중국해에서 국제규범과 기존의 비군사화 공약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인권과 다른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들 보호의 중요성도 주목.
- 합의 1: 4개 분야 (외교안보, 경제, 법과 사이버안보, 사회문화)의 포괄적 대화
- 합의 2: 시진핑의 트럼프 2017년 내 방중 초청

(2) 므누신(Mnuchin) 재무장관, 로스 (Ross) 상무장관 보충설명

- 미국의 무역적자 줄이기 위한 '백일 계획'에 합의, 첫 번째 포괄적 경제 대화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했다.

(3) 질의응답

- 북핵 이견 (킬러슨): 협상의 조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이며, 중국이 미국과 공조할 수 없다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 (President Trump indicated to President Xi that he welcomed any ideas that President Xi and China might have as to other actions we could take and that we would be happy to work with them, but we understand it creates unique problems for them and challenges and that we would, and are, prepared to chart our own course if this is something China is just unable to coordinate with us)

- 중국에 인권문제 압박했나?
(틸러슨): 별로. 미국의 가치는 분명하고 우리의 모든 대화의 핵심에 있어서, 별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중국에게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 얘기했나?
(로스, 므누신) 했다.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므누신) 환율 보고서가 나오면 그 때 이 문제 다를 것이다.
-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 줄일 의지 있다고 보나?
(므누신, 로스) 무역흑자 줄여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통화량과 물가상승 때문이라든; 하지만, 구체적인 백일 계획의 내용과 성과는 협상에 달렸다.
- 중국이 인프라 투자 등 선물 가져왔나?
(로스) 시진핑 방미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다.
- 중국이 미국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리더십 요구했나?
(로스) 그런 기억 없다.

3. 중국의 입장

- 외교부 논평으로 시리아 공습 반대
- 4/9 왕이 외교부장의 “미중 정상회담 상황 통보”: 북핵해법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쌍궤병행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의 쌍중단; 사드 배치 반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9/0200000000AKR20170409036000083.HTML?from=search>)
- 4/10 외교부 대변인: 칼빈슨 항모전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

4. 평가와 전망

- (1)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 선거 운동 기간과 당선인 신분 시절의 강경한 기조와 달리, 트럼프는 취임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즉각적인 보호(복) 관세 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은 하지 않은 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백일 계획'의 협상에 합의했다.
- 시진핑도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인프라투자 등의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지는 않았다.
- 최근 백인 민족, 민주주의자 배년이 NSC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트럼프의 사위 큐슈너가 주도하는 뉴욕 재계의 온건한 대외정책 노선이 트럼프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 트럼프가 기존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백일 계획'의 협상을 일단 추진하기도 한 것은 분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기존 패권질서의 전통적, 정통적인 과제인 다자적 세계자본주의 질서 관리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 오바마의 국내 환경 규제와 국제 기후변화 리더십을 비판하며 트럼프는 석탄 개발, 환경규제 철폐 등에 나서고 있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기후변화 리더십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인데, 이는 미국패권의 시각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 '백일 계획'의 협상이 성과는 불확실하다. 실제 위안화는 최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되지 않았고 미중 경제관계에서의 최대 문제는, 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중국의 법과 행정체계라는 분석에 따르면, '백일 계획'의 성과는 중국의 미국 내 인프라 투자나 수입 증가 등의 '선물'을 트럼프가 예의 과장법으로 성과로 포장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물론 반대로, 중국의 '성의' 부족을 이유로 트럼프가 대중국 무역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다.
- 미중의 쌍무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협력 혹은 담합이나 대립의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도 FTA의 재협상 등 미국에 대한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기존의 사드로 인한 한류나 관광객 감소의 수준을 넘어서 제조업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로 확장될 것이다.

(2) 북핵 문제

-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보호관세 부과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의 경제

- 적 민족주의 의제나 대테러정책에 밀린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던 북핵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 그 이유는 아마도 오바마 정부가 물려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능력의 향상에 대한 정보보고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정책이 맞물려서일 것이다.
 -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래서 중국을 통한 압력이 통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금지선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론은 미국 조야에 넓게 퍼진 듯하다.
 - 중국 역시 유엔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압박을 하거나 한미동맹의 군사적 위협에 동참할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 한국의 기대와 달리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특히 트럼프 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 사드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해친다는 중국의 인식은 확고한데 미국이 중국의 협력에 대한 유인으로 향후 통일 한반도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 보장이나 주한미군 주둔범위의 조정 정도를 내놓아서의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 당장 박근혜 정부의 ‘배반’을 경험한 중국으로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한 유인을 현재의 직접적인 전략적 위협을 감수하며 수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시리아 공습은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결정의 방증이든 아니든,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었다.
 - 하지만 시리아 공습과 이후 항모전단의 한반도 해역 전개를 통한 트럼프 정부의 군사력 시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비핵화의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전혀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핵위협에 노출되어온 북한으로서는 비대칭 전력을 포기하기는커녕 강화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일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반대해왔고, 최근의 시리아 공습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 북핵 문제 해결에서 이들 국가의 협력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 시리아 공습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확대로 이어진다면 이라크 전쟁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의 ‘고난’이 재연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실제 강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Ⅲ.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 vs.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¹⁾

▶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습관적인 증오나 애정을 갖게 되면, 그 국가는 그러한 증오심이나 애정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의무나 국익에서 멀어지게 된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고별 연설(1796년 9월)

▶ “실제로 친박들이 푹푹 뭉쳐 박 대통령의 퇴임 후까지 가려 한다면 당이 온전할 리 없다. 새누리당은 보수, 반공, 친미(親美) 같은 이념에 기반 한 정당이 아니라 같은 출신 지역이나 친분 관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당(私黨)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박 대통령, 친박들 호위 받으며 어찌겠다는 거냐?” (2016년 5월 20일)

2017년 5월 9일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위법·위헌 행위를 주된 이유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 가결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민심’의 압력 때문이었고,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의 비극적 사례인 세월호가 물으로 인양되었다.

1) 아래는 줄고, “차기 정부의 대미정책: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 vs.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포커스』 2017년 봄호이다.

5월 9일 ‘장미 대선’으로 출범할 새 정부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은 박근혜로 대표되는 구체제의 적폐 청산을 새 정부의 역사적 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탄핵에 반대한 ‘태극기-성조기 민심’은 물론 제도권 정파 사이에, 그리고 ‘촛불 민심’ 내부의 이견으로 인한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불가피하다.

대외적인 도전도 험난하다. 경제적 저성장의 뉴노멀이 도래했고,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강화되었으며, 한국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해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중단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지속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안보는 물론 가치의 공유를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문화 등의 제반 영역에서 그리고 한반도는 물론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한다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한미 전략동맹의 ‘불편한 진실’은 전략권 환수를 두 번이나 연기하면서 강화된 양국의 군사동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체를 방지하지는 못했으며,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주권적 권리의 명분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용으로 배치를 결정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의 군사적 논리 혹은 관성이 한중관계, 더 넓게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의 기반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문제로 한일 관계 또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전략동맹이 한국 외교의 ‘미국 우선주의’라면,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시작으로 2016년 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을 통한 박근혜 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정책은 ‘미국 유일주의’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최대 외교적 도전은 미국 트럼프(Donald J. Trump)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이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값싼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사이, 미국정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 백인 노동자들의 책

슨주의, 미국 판 민중민족주의의 광풍에 휩싸였다. 부동산 재벌이자 TV 리얼리티 쇼 진행자로 정치적 국외자였던 트럼프는, 패권을 추구하는 글로벌리즘과 배치되는 미국의 백인 노동자의 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반전을 연출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적 가치와 제도의 수출은 포기하고 경제적 민족주의를 추진하며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본다. 이는 한미 전략동맹의 가치와 경제, 안보의 근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짧게는 냉전의 종언 이후 미국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길게는 이차대전 이후 미국패권의 전통과 정통을 부정하는 이단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한국 새 정부의 대미정책은, 북한의 악마화와 병행된 한미동맹의 신성화나 이념화된 친미를 넘어서 한국의 '객관적인' 현실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와 안보, 그리고 경제발전을 조화시키는 한국 우선주의여야 한다.

1.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

한국외교에서 미국은 항상 핵심적인 축이었다. 하지만, 한국 외교의 과제 혹은 정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한미관계나 동맹이 전부는 아니었다. 정부 수립 이후 탈식민이나 분단국가로서의 정체성, 강대국이 쟁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에 대한 인식이나 아시아 지역 국가로서의 정체성 등이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존해왔다.

한미관계가 다른 정체성들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은 냉전의 종언 이후이며,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관계 전반의 정치,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공간적으로 세계화되는, 특히 한미관계 전반이 동맹의 이름으로 치환되는 전략동맹의 등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래 보수 정권의 집권 이후였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안보나 경제를 의존하던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부 시절의 한미관계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 이래의 미국 우선주의처럼 절대적이지 않았다. 미국과의 정치적 불화라는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탈식민이나 분단, 아시아 지역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승만의 경우 한국전쟁 휴전과정에서의 반공포로 석방은 물론 한미 상호 방위조약 서명 이후에도 북진통일과 반일정책으로 미국과 대립했다. 1954년 7월 방미한 이승만은 미 의회연설에서 소련에 대한 예방전쟁을 주장했고, 아 이젠하워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발효조건으로 북진의 포기,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현실적인 환율정책, 대한원조를 일본상품 구매에 사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이승만은 귀국 이후 미군의 현지 경비 대출 을 중단했고, 미국은 7억불의 대한원조를 유예했을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되기 직전에 또 ‘사사오입’ 개헌의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11월 17일에야 이승만은 미국의 요구를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고, 한미동맹은 발효되었 다. 12월 31일 자 경향신문은 “이 분규의 114일 동안 정부가 UN대여금의 방출을 중지함으로써 미측이 유류를 중단하기에 이르러 일어난 혼란은 이 나 라 부흥경제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미국과 대립했던 이승만 정부에서조차 혈맹의 신화를 위해서 ‘114일의 한미분규’는 망각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국가나 탈 식민(반일)과 분단(통일)의 정체성은 한미동맹의 정체성에 앞서는 것이었 다. 이승만 정부가 발간한 『외무행정의 십년』(외무부, 1958)에서 대미관 계는 각국 외교의 범주에서 일본과 중국(대만) 등에 이어 7번째로 다루지 며, 이어지는 외교문제의 설명은 정치(통일)와 경제의 순이다.

박정희 역시 쿠데타로 집권해서 베트남 파병과 미국의 숙원이었던 한일 관계의 정상화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지만, 닉슨의 괄 선언 이후 미중 화해의 충격 속에서 자주국방과 유신체제, 그리고 이후 카터의 인권 외교와 박동선 사건 및 미국의 점증하는 수입규제로 인한 무역마찰 등으 로 미국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 1979년 8월 15일 자로 발행된 『한국외 교 30년: 1948-1978』(외무부)도 한미관계를 지역외교의 범주에서 아시 아외교에 이어 북미외교의 일부로서 캐나다와 같이 다루고 있으며, 이후 통일, 안보, 경제 이슈 순의 정리를 이어간다.

한미관계는 냉전이 끝난 이후인 1999년에 발행된 『한국외교 50년: 1948-1998』(외교통상부)에서야 주변 4국 범주의 일부로 일본, 중국, 러

시아와 아시아외교에 앞서서 다루지기 시작했다. 이때도 이슈별 순서는 통일, 안보, 경제통상이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한국외교 60년: 1948-2008』(외교통상부)에서는 안보 및 통일, 유엔 및 다자외교, 경제통상외교의 새로운 이슈별 정리가 나타난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외교백서』에서 미국외교는 아예 주변 4강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와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북핵문제를 다루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장(범주)에서 다루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코리아’의 이름으로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지역의 정체성보다 우선시켰다면, 박근혜 정부의 미국 유일주의는 북핵의 위협과 통일대박의 희망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체성으로 분단(북한)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러한 보수의 미국 우선/유일주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보수의 이념적 반발이기도 하다.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진보정권이 남북화해로 북의 정권을 연장시키고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세계질서의 변동과 엇갈렸다는 점이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침공 이후 전후 재건의 고난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의 한계를 노정하고 세계질서의 불안정자 역할을 해왔으며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냉전의 종언 이후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한계를 노정했다. 미국에 ‘올인’하는 보수의 전략은, 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 및 북중 관계의 특수성 혹은 가치의 분단선으로서의 한반도 위상을 망각한 채,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락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2.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당선은 이라크 전쟁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은 미국패권의 (세 번째의) 정치적 위기이며, 브렉시트와 맥을 같이 하는 기존의 세계화와 패

권질서에 대한 미국 판 민중민족주의의 반발로 인한 단극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2017년 3월 “자유주의 질서는 무엇이었는가?(What Was the Liberal Order? The World We Maybe Losing)”라는 제목으로 1943년부터 최근까지 Foreign Affairs 지에 실렸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관한 주요논문들을 묶어서 펴냈다. 외교협회는 1919년 파리 평화회의의 준비 작업을 맡은 전문가 집단, ‘조사(The Inquiry)’의 후신으로, 윌슨주의, 혹은 보다 넓게는 미국 국제주의의 적통이다.

편집자 로즈(Gideon Rose)가 밝히는 편집 의도는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으로 인해 파괴될 지도 모르는 자유주의 질서의 소중함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패권이 수립한 자유주의 질서는 비록 저성장, 불평등, 테러리즘과 난민 등 초국적 문제에 대한 부실한 대응, 엘리트의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의 병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미국패권의 초국적인 지배엘리트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재건축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 자체에서부터 그러한 재건축의 정치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자국의 정책을 수립한, 로즈가 “같은 팀의 동료들”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의 미국 동맹들이 충격에 휩싸인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마도 박근혜의 미국 유일주의일 것이다. 국방부 예산은 10% 늘리고 국무부와 대외원조 예산은 30%를 삭감하는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에, 트럼프 정부의 신임 국무장관 틸러슨(Rex Tillerson)은 인터넷 언론 한 곳만 동반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난하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미중 양국이 갈등과 대립 대신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중국이 그간 요구했던 신형대국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낳았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오해’를 해소할 수는 없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공격 옵션도 한반도의 전쟁 참화로 이어질 것이란 점이나, 사드의 기술적 효용을 100% 인정하더라도 성주의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일본은 물론 미국의 태평양 기지와 본토로 늘어나는 위협에 맞서서, 작년 9월 미국 외교협회의 초당파적인 전문가 집단의 대북정책 제안서(“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는 북한의 한미일 삼국 중 일방에 대한 공격을 삼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삼국의 공동선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판 나토인 썬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 한국이 전쟁에 연루되는 기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적 열정에 의한 전략적 ‘오판’도 적폐이지만, 그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적폐는 침몰하는 세월호의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처럼, 사드로 인한 경제적 보복이 없을 것이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무책임이다.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시장 다변화 운운하는 것은 망발일 뿐이다.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세계 경제의 성장을 그나마 견인할 동력은 중국뿐일 지도 모른다. 한편 모든 자유무역 협정의 재협상을 공언하면서 최근 G-20 공동선언에 자유무역 조항의 삽입을 반대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굳건해 보인다. 당장의 한류나 앞으로 현실화될 지도 모르는 제조업 분야의 피해를 넘어 미래의 중국 시장에서의 접근성을 차단당할 위험을 안고서, 주권의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포기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3. 워싱턴의 교훈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고별 연설은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의 전쟁으로부터 중립을 지키고자 했던 미국 우선주의의 산물이다. 그

는 신생 공화국의 독립을 파괴할 지역주적 파벌 및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습관적 애정과 증오’로 미국의 국익을 해칠 영구한 동맹의 위험을 경고했다. 그가 보기에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호의(real favor)’를 믿은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었다.

2016년 4·13 총선의 패배 이후에도 당의 쇄신이 아니라 친박 세력의 호위로 몽니를 부리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당의 분열과 국정외 혼란을 경고한 조선일보의 5월 20일 자 사설, “박 대통령, 친박들 호위 받으며 어찌겠다는 거냐?”는 정확한 것이었다. 결국 박근혜의 예의 몽니와 유체이탈 화법이 탄핵과 보수의 분열, 그리고 본인의 구속으로 귀결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친박으로 제대로 된 정당을 꾸릴 수 없듯이 이념화된 친미로는 제대로 된 보수정치도 대외전략도 수립할 수 없다. 미국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반미’의 트럼프와는 어떻게 ‘친미’할 것인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전쟁을 벌이겠다는 데도 친미할 것인가? 한미 동맹에 ‘올인’하는 ‘글로벌 코리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간과한 유체이탈이 아니었던가? 박근혜의 미국 유일주의는 분단국가의 정체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게다가 중국 부상의 현실까지 간과한 유체이탈이 아니었던가? 협상을 위한 협상이 문제라면, 동맹을 위한 동맹은 더욱 문제다. 친미하려거든 워싱턴의 교훈부터 배우자.

발표 2

북한의 현실과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一觸即發의 한반도

워싱턴에서는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미 하원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일반적인 분위기는 북한의 김정은이 비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행동(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에 이어 이복형 김정남까지 살해한 것은 김정은이 비이성적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의 독주로 인해 운명공동체로 엮여져 있는 최고위층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김정은이 이대로 가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최고위층(최측근)도 덩달아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김정은 제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 미 대통령마저 비이성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를 감안할 때 자칫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통상 문제와 더불어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 행동¹⁾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북한은 한미 군사

1) 미국의 독자적 행동이란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이 북한을 담당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미국이 가져올 것이라는 지극히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한다.

훈련 와중에 평안북도 동창리 북쪽에서 4발의 중거리 미사일(이동식 발사대 이용)을 발사했고 이 중 일부는 일본의 EEZ 안으로 떨어졌다. 원산 인근에서도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비슷한 지역에서 다시 발사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미국은 추가적 대북 제재 및 대북제재관련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인 가운데 대선에 몰입하고 있어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정세의 급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반도는 현재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에 몰려 있다. 김정은은 과연 2016년 1월과 9월에 갑자기 핵실험을 단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험을 용인하는 사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위성 발사가 아닌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은 김정은이 비이성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 속담에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김정은이 미친 듯이 날뛰면 미국은 몽둥이를 들 것인가?

김정은은 불안정?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판단하듯이 김정은은 과연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인가? 이런 판단의 근거는, 뚱뚱한 젊은 놈(1984년생)이 아래위도 모르고, 경험도 미천한 데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차별하게 주변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은 무시한 채 시도 때도 없이 대량살상무기를 쏘아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공포정치로 인해 표현을 못 하고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서방식 기준과 시각에 근거한다. 상대방의 지도자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면 승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상식으로 통한다. 다윗과 골리앗을 싸움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특수성에 기초해서 김정은의 능력에 대해 객관적이며 냉정한 평가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김정은이 불안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단히 이성적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어 본다.

첫째,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라 김씨 봉건왕조이며 김정은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왕조국가의 왕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김정은은 어려서부터 왕 교육을 받아왔으며 생활을 그렇게 했다.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는 곧바로 사병 복무를 한 이후 김일성 군사대학에서 수학했으며, 2003년부터는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다. 2009년부터는 실질적인 국정에 투입되어 국내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나이에 비해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 사후 갑자기 권력을 맡게 된 것이 아니며, 5년이 넘도록 북한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장성택의 처형과 김정남의 피살도 가족관계 속에서 보면 안 되고,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봉건왕조 시절 권력에 도전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인물은 대부분 가족관계에 있는 인물들이었고, 이들의 최후는 처참했다. 절대 권력은 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북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를 당연시 여긴다. 북한 주민들도 여전히 봉건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5년 동안 북한 내부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외부에서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50년 만에 당의 정책노선을 국방·경제 병진노선에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으로 전환했다.²⁾ 당중심의 정책운영 방향을 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핵무력이 고도화(북한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됐으며 농업과 경공업 부문을 집중 재건함에 따라 식량의 자급율을 높이고, 생필품의 자체 조달 능력을 제고해 오고 있다. 시장 활동에 대해서도 허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2) 2013년 3월31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될 당시에는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이었으나 2016년을 전후해서 경제건설·핵무력 병진노선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국방·경제 병진노선도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바뀌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나라가 외부의 위협을 핵으로 막아 내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알아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군사적 대응 범위를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주적을 미국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전략적 작전 범위는 적어도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관할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 무기의 주요 소비국가들은 중동 및 아프리카에 있다.金正은의 스탭들은 이 지역의 동향과 그것이 북한에 미칠 영향 등을 항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물론 재정적으로 자금을 충분히 투입할 능력은 안 된다.) 2016년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1기만이 발사에 성공했고 나머지는 실패했는데, 이는 미국의 전파방해 작업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최근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북쪽 해안지역에서 중거리 미사일(북극성 2호) 4기를 발사했다. 우리측에서는 사전 발사를 감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전 역지도 못했다. 북극성 2호 발사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으며, SLBM(북극성 1호)을 개량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식 발사는 미국의 방해작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을 선보인 것이며, 나아가 일본 EEZ에 떨어지도록 했다. 이는 미사일의 작전 반경을 미군의 오키나와 기지를 비롯한 일본내 기지 및 괌 기지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기지를 일시에 공격할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아울러 중국 역시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미·중 간에 북한문제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북한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최근 김정남 피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아마도 김정남 피살은 장성택 사건과 연계되어 오래전에金正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시를 받은 기관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안전보위성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진행됨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던 지시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판단된다.金正은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지금이며,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김정남 사망 직후 공개된金正은의 영상을 보면 상당히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리과정을 보면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이 받아오고,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는 정상화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결과적으로 밑에서 사고 친 것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다.

다섯째, 김정은은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원하는데 점차 미국과의 직접 담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까지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복잡다변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대응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과 연이은 위성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 직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흥미롭다.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룰 때 군사적 옵션에서 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북한은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요구조건을 이미 밝히고 있다. 조건 없는 대화 재개, 경제 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의 진전에 따라 핵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협상에서 빠지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김정은은 서방에서 판단하듯이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방의 잣대로 김정은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라는 점에서 김정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미국이 의도적으로 김정은을 비이성적이고 불안정한 인물로 몰아가면서 정세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다른 말이지만,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실제로 김정은을 깔보는 듯하다.

핵 실험과 ICBM 발사를 단행할 것인가?

김정은이 충분히 이성적이라고 전제할 때, 핵실험, ICBM 발사 등의 군사적 도발을 단행할 것인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핵실험과 ICBM(위성발사 포함)발사는 세가지 사항, 1) 자주성(自主性) 지속 2)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3)한국의 차기 정부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고려할 것이다.

1) ‘자주성 지속’이란 북한의 당 정책노선인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외부적 환경 변화와는 무관하게 정해진 개발 일정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 중공업 부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연간 계획 및 다년간 목표시점에 맞춰 일정을 짜고 그에 따른 실험 등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으니까 아직도 장거리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듯하다. 다만 위성발사를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에 필요한 기술을 실험하는 작업은 언제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핵실험 역시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기술적 개선을 해야 할 상황이다.

2)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모든 옵션이라는 것은 횡적(橫的)으로 군사적 행동부터 협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하여 티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발언도 현재의 북한 행동에 대한 언급일 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종적(縱的)으로는 미국의 전(全)세계 대외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동북아 정책(중국 등을 포함) 그리고 대북 정책의 순으로 정해질 것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정책의 대략적 방향성은 미국 우선주의, 강력한 미국 등으로 정해진 듯하지만 동북아 정책이나 대북정책은 아직 검토 중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상대

편의 행동에 맞춰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압박정책을 지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강공책 등을 구사한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오기 전에는 ‘자주성의 지속’ 관점에서 상황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내부적 필요성(일정에 따라)에 맞춰 움직인다. 현재 미국은 아직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니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3)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북한은 남북관계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2013년~2015년 김정은의 신년사에 나온다. 복잡한 국제정세에 남북한이 힘을 합쳐 대응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물론 이런 내용은 북한이 항상 주장해오던 내용이지만, 2016년 신년사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이 한국정부(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면서 독자적 대응을 언급했다. 연이어 2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것은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탄핵이 이루어지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북한은 대남 문제에 대해 다시 김정은이 당초 언급했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 기관들의 반응도 차기 정부의 정권교체를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보위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이면(裏面)에는 남북 간 교류확대에 따른 내부 정비작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김정은의 고려 우선순위를 기초로 판단할 때 정해진 일정대로 라면 북한은 지금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다. 핵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은 되도록 주요 행사 시점(김씨 일가 생일, 당이나 군의 창건일 등)을 개발 목표시점으로 잡기 마련이다. ICBM은 현재 대기권 재진입 실험에 이어 엔진 출력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므로 전체를 조합한 시험 발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조만간 행동에 옮기기에는 아직 이른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북 강경책과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경우 김정은이 핵실험을 결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핵실험에 대해서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만한 미국의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가중하는 선에 머물 수밖에 없

으므로 김정은은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고려사항인 한국의 신정부의 성격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은 남북한 공조를 기대하게 되는데 대선과정에서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오히려 보수측의 표 결집을 야기하기 때문에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진보진영의 당선이 확실시 될 경우 북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험을 단행할 여지는 충분하다.

종합해 보면 북한은 상대편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한다. 그러나 기본은 자주성을 지속하는 것이다. 미국이 대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간단히 핵실험을 중단하거나, 남북관계가 재개됐다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북한 스스로 판단하기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남북 간에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에 확신이 서고, 그에 따른 보장이 마무리될 경우 고려해 볼 문제인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 예상하고, 한국은 진보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및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시점이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일지, 한국의 진보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이 될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확정지은 이후가 될지는 김정은의 판단에 따를 것이다. 다만 북한은 핵실험을 지속하는 것이,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기보다 북한의 능력을 높여 체제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실험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차피 지금 분위기라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미국의 독자적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협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국의 독자적 행동의 명분도 얻게 되는 셈이 된다. 다만 ICBM의 경우, 기술적으로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결적 국면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김정은의 북한 다루기

불안정하지도 않고 비이성적이지도 않은 김정은은 좀 더 치밀하고 예민하게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의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김정은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만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결코 얽잡아 볼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직된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첫 작업이라고 한다면 일단 김정은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우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한다. 그 역할을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직접 나서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중국이 직접 나섰지만 번번이 미국에게 당했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이끌어 내고 대화 테이블에서 일단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확산의 잠정적 중단과 경제제재 완화 및 한미 합동군사 훈련의 순차적 완화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항상 주장하듯이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해 봉건국가의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작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와 확산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발표 3

북·미 충돌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제안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 북핵, 북한문제 해법으로 ‘베트남모델’ 고려해야

북핵문제가 한반도를 최고수준의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배경은 먼저 북한의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4차, 5차의 연이은 핵실험과 SLBM을 포함한 수 십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확인되고 있는 전례 없는 공격적 성향의 표출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 트럼프정부의 등장과 함께 매티스 국방장관 등 강경파의 군사작전에 주저함이 없는 강성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북미간의 강성정책간의 충돌 가능성이 현재의 심각한 위기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3월 9일자 분석기사에 따르면 3월 6일 북한이 동시에 일본해를 향해 4발을 쏜 미사일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유사시 일본 내 미군 기지를 핵 탑재 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을 가상한 군사훈련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던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중에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소위 김정은 참수작전(Including its leadership)을 포함하는 작계5015(OPLAN 5015)로 알려진 전쟁연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북한의 핵탑재 미사일의 일본 내 미군기지 공격훈련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이미 북한을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예측하고 미국이 공격

을 할 경우에 한반도만이 전쟁무대가 되지 않고 동경 미사일공격까지 포함하여 일본까지 전쟁무대가 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에 대단히 크게 압박을 주는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전쟁무대가 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본까지 전쟁무대가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도 타격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국지전이 미중충돌을 중심으로 한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메케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한국전쟁 종전 이후 전쟁가능성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4월6일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핵합의는 결렬된 채 트럼프 정부는 시리아 타격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회담 직후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핵을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다’고 했고, 트럼프대통령은 4월 5일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한 바 있다.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까지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북한 민족주의의 핵심

현재 북핵을 매개로 북미간의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왜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2012년 개정헌법에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천명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국가 통치이념이다. 주체사상의 사상적 기초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1957년 ‘반종파투쟁’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북한체제는 건국과정에서 결정적 도움을 준 소련과 한국전쟁시 체제붕괴의 위기를 구해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심대한 영향을 받았었다. 이에 김일성은 57년 반종파투쟁을 통해 친중파인 연안파와 친소련주의자들인 소련파를 숙청하고 유일적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 투쟁과정을 통해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와 외교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원칙을 세우게 된다. 이는 전체주의적 좌파민족주의국가의 성립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주체철학 사전’에서 민족주의에 대해 ‘전민족적 이익을 내세우면서 자기민족내의 부르조아지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한다. 대신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즉 민족해방운동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투쟁론적 역사관에 기반한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다. 20세기의 민족주의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제국주의와 이에 대항한 제3세계국가의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21세기의 민족주의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90년대 소련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혼란을 겪던 러시아는 2000년 푸틴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대러시아 민족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10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국민 75%정도가 신자인 러시아정교와 결합하여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2002년 후진타오의 등장과 함께 동북공정 등 패권적 민족주의 경향을 보이다 2012년 시진핑 체제에서는 중화 민족주의라는 좀 더 이론화 되고 적극화된 공세적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침체기를 겪은 일본은 2012년 아베의 등장과 함께 ‘보통국가 건설’등 강경보수 민족주의적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이 같은 21세기 새로운 민족주의 성향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분출되고 있다. 중동지역 터키 에도르안의 투르크 민족주의, 인도 모디 총리의 힌두민족주의의 득세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의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사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본고장 영국에서도 민족주의 성향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급기야 미국에서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정부의 등장과 함께 21세기 신민족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신민족주의의 특징은 첫째 경제적 국익의 증대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정부가 대표적이다. 둘째 20세기 종족적 정체성에 기반한 패권적 민족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와는 구별 된다. 대부분 근대국가의 틀과 연관된 문화적 정체성과 애국주의와 결합된 운동 또는 정책으로 표출된다. 물론 신민족주의흐름 속에는 종족민족주의, 인종주의 등의 부정적 요소가 섞여 있기도 하다.

북한의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민족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이론적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민족운동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북한에서도 민족주의가 핵심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의 1986년 논문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제기된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상징적이다. 김정일은 나아가 김일성사후 주체사상을 선군사상으로 발전시켰고 이를 1998년 개정헌법부터 적용하였으며 국방위원회를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정립시켰다. 그런데 김정일이 제기한 선군사상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보유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90년대 말 북한은 국가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한 ‘핵무기보유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0만 명 내외의 아사사태를 겪으면서도 핵무기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북한민족주의의 핵심은 북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북핵문제는 현재의 김정은체제가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이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민족주의와 시진핑의 중화민족주의

지난해 미국대선에서 트럼프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성정치인들을 모두 기득권으로 공격하면서 대선승리를 이끌게 된다. 트럼프의 승리배경에는 세계화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한 경제민족주의가 있다. 트럼프의 핵심참모 배넌은 자신을 경제민족주의자라고 주장하였고,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the understanding that it is the right of all nations to put their own interests first)’고 밝혔다. 이는 세계사적 흐름과 질서가 현실적으로 각국의 경제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과정에서 형성된 선진자본주의국가 내부의 양극화문제, 중국의 부상 등 세계질서의 변동, 일부실패국가의 난민문제와 테러문제 등은 세계 곳곳에 민족주의흐름의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중국은 공산당 주도하에 권위주의적, 패권주의적 민족주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반도체, 철강, 조선산업 등에 대한 막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구글, 카카오 등 해외 첨단 업체의 중국시장 차단, 최근 한국의 안보차원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각종 경제보복조치 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2012년 시진핑체제의 등장이후에는 군사적 차원의 공세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첫째, 남중국해에 인공섬 조성을 통한 태평양지역 해양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것과 둘째,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nti Access Area Denial)전략으로써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이고,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의 전략가 배넌은 향후 수년 내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까지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 트럼프정부의 경제민족주의와 중국 시진핑정권의 중화민족주의간의 충돌 가능성은 동북아시아정세를 심각하게 위태로운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다시피 현재 미국과 중국의 세계대전은 그 충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따라서 현재 국면에서 미국과 충돌이 벌어진다면 전면충돌이 아닌 국지전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역은 남중국해 또는 북핵문제를 세계적인 핵심이슈로 끌어올린 북한이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세력변동과정과 헤게모니 쟁탈전 과정에서 전쟁의 수렁으로 빠진 경우가 많다. 16세기 일본의 부상과 임진왜란, 17세기 청나라의 부상과 병자호란, 19세기 일본과 청나라의 한반도 헤게모니 쟁탈에 따른 청일전쟁, 20세기 미소간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21세기에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중간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반도를 무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핵무기문제를 세계질서의 관리차원에서 핵심적 이슈로 다루어 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중간의 충돌 가능성은 앞에서 분석한 북한의 핵무기보유국가 달성에 대한 집착문제와 착종 결합되어 북미충돌을 통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배치 철회는 한미동맹약화와 한반도전쟁 가능성 높일 것

현재 미중간의 충돌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사드문제이다. 사드문제는 박근혜정부의 등장과 함께 외교안보사안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였다. 중국은 시진핑체제의 등장과 함께 중화민족주의를 앞세워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헤게모니를 확보할 두 개의 핵심 고리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한국의 사드배치 저지를 목표로 세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진핑정권은 박근혜정부출범과 동시에 사드배치저지를 위한 외교전을 전개한다. 이때 박근혜정부는 박근혜대통령 자신과 핵심 측근들의 비미친중정서와 북핵, 북한문제해결 및 통일추진과정에서 중국의 중대역할론 등을 배경으로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사드배치 요구는 지속되었는데, 그것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존 패트리엇 PAC-3의 요격 가능 시간이 수 초에 불과,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부터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외부적으로 한미동맹균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것이 표출된 것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15년 2월 국회국방위원회의에서 공식화 하면서 부터다. 이 같은 박근혜정부의 친중정책에 기반한 사드배치 거부 입장은 2015년 9월 중국의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천안문광장 행사에 자유민주주의국가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참석하여 시진핑을 기쁘게 한 것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 친중정책의 종언을 고하게 만든 것은 200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이었다. 박근혜정부는 북핵, 북한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의 지대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미국의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거부하는 등 역대 한국정부 중에서 최고수준의 친중정책을 취해 왔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전에 어떤 의미 있는 역할도 하지 못한데다가 4차 핵실험이후에도 중국과의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사드배치를 결정하게 되고 한중관계는 악화국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차기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예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 북미충돌, 미중충돌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사드문제에 대한 ‘전략적모호성’과 관련한 문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박근혜정부의 실패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사드배치철회는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불장난에 가까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북성주에 배치 진행 중인 사드는 미국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방어 범위도 평택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남부 충청도 경상북도 중심이라 할 수 있다. 1차적 목표는 주한미군 방어다. 군사작전의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핵탄재 미사일을 1차적으로 방어하고 나서 반격에 나서게 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철회 할 경우 미국, 미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시도 가능성을 훨씬 높이게 된다. 왜냐하면 평택기지를 중심으로 2만8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존재하는데 북한의 선제 핵미사일 공격이 실행될 경우에 사드라는 미사일방어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이 용인하기 힘든 손실이다. 따라서 사드배치가 철회될 경우에 미국, 미군은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의 이상한 행동을 포착할 경우에도 미군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현재 위에서 언급한 민감한 한반도정세를 고려할 때 핵전쟁이라는 대재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드배치철회는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대단히 키워주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첫째 트럼프 정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핵 해결을 명분으로 한국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게 만들어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을 중국에 종속적인 국가로 만들게 되고 한반도의 통일도 힘들어 질 것이다.

북핵, 북한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사드 등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반위에서 한국주도로 북핵,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처방전(Prescription)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합작의 ‘베트남 모델’이 북핵, 북한문제 해결의 평화전략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북한과 가장 비슷한 성향을 보여 온 국가는 베트남이다. 북한은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하였고, 20세기 최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강대국들이었던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자주적 외교를 벌였다. 베트남은 프랑스제국주의 및 일본제국주의와 독립전쟁을 치렀고, 최강대국 미국과 전쟁 끝에 승리했으며, 사회주의대국 중국을 1979년 국지전 끝에 격퇴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두 국가 모두 고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도이모이로 표현되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1992년 시장경제요소를 장려하는 새로운 개정헌법을 공포하면서 시장경제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 시기(1994~1995)를 거쳐 1995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하게 된다. 이 기간을 거쳐 베트남의 무역액은 경제제재시기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나아가 미국과 항구적 정상적 교역관계를 수립하고, WTO에 가입한 2007년 후 대외무역액은 1063억 달러로 미국의 경제제재 시기에 비교하여 19배 증가하였다. 이 과정은 외적 강제에 의한 체제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시장의 확산에 기초한 내부의 점진적 개혁을 통한 체제의 진화(Regime Evolution)였다고 평가된다.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협력적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2014년 초 체결된 미국-베트남 간 원자력협정의 내용은 2015년 6월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보다도 더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있기도 하다. 그 배경은 미국이 그만큼 베트남을 아시아 전략의 핵심인 중국견제와 관련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체제이지만 시장경제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권위주의적 좌파민족주의국가라 할 수 있고 미국과 전략적 차원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 북한체제 최대 위기인 90년대 말 100만 명 내외의 아사사태를 야기했던 식량난을 해결한 것은 북한의 노동당도 아니었고, 한국의 지원이나 중국의 지원도 아닌 다름 아닌 시장이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2014년 ‘5.30조치’까지 시장의 허용이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조금씩 확대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을 시장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식량난을 극복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2017년 3월호’ ‘북한 종합시장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허가돼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세금을 내는 종합시장이 404개라고 한다. 이 같은 시장의 확대 과정에서 북한주민들과 당 간부들 내에서 시장의 필요성,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시키려는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은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체제에서 시장의 부분적 확산과 함께 좌파의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베트남과 북한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구조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반한 선진화(Regime Evolution)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북한의 선진화(산업화와 부분적 민주화가 결합된 ‘베트남식 모델’)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베트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미관계도 우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북핵문제도 한반도에 핵전쟁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정밀타격작전, 참수작전이 아니라 북한의 선진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변화된 북한정권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차기정부는 한미동맹을 재정립,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 협력하여 군사작전을 통한 북핵문제, 북한문제 해결시도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맞춤형개입정책(Optimized Engagement Policy)을 기반으로 한 ‘베트남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핵,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한미합작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전쟁위기가상항으로까지 몰리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전환시키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월간중앙 5월호에 ‘북핵과 북한의 민족주의’를 주제로 기고한 글과 일부 내용이 중복됨을 밝힙니다.)

